

오피니언

11

사설

수강 경쟁, 결국 부족한 교육기반

매 학기 수강신청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원하는 강의를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의 하소연이 들려온다. 듣고 싶은 강의를 잡기 위해 수강신청 시작과 동시에 '클릭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물론, 정규 수강신청 이후 정정 기간에도 학생들은 내내 수강신청 사이트를 들락거리며 빈자리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고군분투해도 끝내 원하는 강의를 잡지 못해 차선책을 택하거나 다음 학기를 기약하는 이도 적지 않다. 이런 모습은 어느새 대학에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우리신문에서 지난 학기 미디어학과·사회학과·국어국문학과와 전공 강좌를 집계한 결과, 같은 대학 안에서도 학생의 전공 수업 수강 여건은 학과에 따라 달랐다.

미디어학과는 재학생 683명에게 1,557석이 제공돼 학생 1인당

2.28석이 확보된 반면, 사회학과는 237명에게 1,145석으로 4.83석, 국어국문학과는 316명에게 1,709석으로 5.41석이 확보됐다.

물론 강좌의 성격과 수업 방식, 정원 기준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히 수치만으로 교육 여건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같은 대학 안에서 학과별 학생 규모와 수업 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학과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수업마다 적정 수강 정원이 다르고, 과제와 학생·교수자간 상호작용이 많이 필요한 수업은 수강 정원을 무작정 늘리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원, 강의실과 같은 기반은 필요하다고 해서 즉시 늘릴 수도 없다.

결국 문제는 정원을 몇 명 더 늘릴 것인지에만 있지 않다. 재학생 수와 수업 수요에 맞춰 교원과 강

좌, 강의실 등의 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까지 살펴야 한다. 학과에 '증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학과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면 대학 차원에서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곳에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년도 입학생부터 다전공 이수가 의무화되며 학생들의 수강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우려도 있다. 특정 학과의 수업 수요가 증가할 경우 지금과 같은 강좌 정원과 공급 구조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 미리 따져보고, 제도 확대에 맞춰 교원과 강의실 등 인프라도 함께 확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수강신청은 단순한 클릭 경쟁이 아니다. 전공필수 과목이라면

졸업 요건과 직결되고, 전공선택 과목이라면 학생이 자신의 학업 방향을 설계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해 학업 계획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을 단순히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순 없다.

모든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원하는 시기에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전공필수 과목을 듣지 못해 다음 학기를 기다리고, 몇 날 며칠을 수강 정정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을 '수강신청은 원래 그런 것'이라며 당연하게 받아들이어서는 안 된다. 학생 수요에 맞는 교원과 강좌,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대학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수강신청을 '울클'하는 요령이 아니라, 수강신청에 실패하지 않을 충분한 교육 기반이다.

세시봉

엇갈린 10분

김가빈 기자
woo289504@khu.ac.kr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 과정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원서접수 대행기관인 '유웨이어플라이' 사이트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모집 마감 10분 전 일부 수험생들이 수시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하고 수험생 시절 실시간 경쟁률을 확인하려 입학처 홈페이지를 새로고침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수시는 단순히 서류 몇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다. 고등학교 3년, N수를 더한 경우라면 그보다 긴 시간 동안 쌓아온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혹자는 "경쟁률은 숫자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소신 있는 지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수험생에게 경쟁률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당시 나는 매일 실시간 경쟁률을 확인하며 지원 학과를 바꿀지 고민했고, 숫자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다. 소신을 지키라는 말이 응원일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불안을 감당하는 사람의 사정을 모르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다.

올해는 그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9등급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임시인 만큼 N수생 규모가 역대급으로 늘었다. 실제로 2027학년도 수능 응시자 중 졸업생 비중은 지난해 28.9%에서 올해 31.5%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마감 전 10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학생 간 형평성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사태의 발단은 원서접수 시스템이다. 수시는 매년 수십만 명의 수험생이 이용하는 대입의 핵심 절차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여태껏 원서접수 시스템을 민간업체에 의존해왔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지나간 혼란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수험생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공적 원서접수 체계 검토를 포함해 대입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수험생에게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공정한 입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면, 국가가 지켜야 할 책임도 있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지속되는 후마 평가방식 논의

질문을 바꿔봅시다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평가 방식을 취재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였다. 학생도, 교수도, 과거 우리신문 기사도 결국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무엇이 더 나은지에 집중했다. 자연스레 취재를 시작할 땐 둘 중 무엇이 후마의 교육철학에 더 적합한지 알아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취재를 이어갈수록 둘 다 후마에 적합한 평가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현재 후마 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대평가는 깊게 사유하는 공동체적 인간을 기르겠다는 후마의 지향점에 맞지 않았다. 절대평가는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교강사 강의평가 문제로 학점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었다.

지난 15년의 논의를 돌아보면 우

리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무엇이 더 적절한지를 두고 논쟁해왔다. 하지만 정작 후마 교육의 성취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지,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려 있었다. 평가방식은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데, 어느 순간 수단을 선택하는 일이 목적을 논의하는 것보다 앞서게 된 셈이다. 여러 교수를 만나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지금의 방식이 후마의 교육 목적에 적합하다고 말하는 교수는 아무도 없었다.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엔 모두 공감했다.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교수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교수도 결국 더 나은 교육과 평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15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면 이제는 질문 자체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가 아니라 '후마에서 학생이 무엇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후마가 추구해온 교육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평 옳은 길을 찾아가야 할 후마 평가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엔피